

사례제목¹ (정책명 ²)	계약 규제와 관행 혁신으로 중소 지역기업과 포용적 성장관계를 구축하다. (중소·지역기업 수주확대를 위한 입찰·계약제도의 선제적 개선)				사례 유형³
기관명⁴ (부서명 ⁵)	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				
분야⁶	1차	코로나19 관련 Y ■ N □			
	2차	국민생활 안정지원 □ 기업지원 ■ 재난·안전 □ 규제개혁 ■ 기타 □ (직접입력 :)			
공적자⁷	구분	부서명	직급	성명	연락처
	주 공적자	재무관리처	2급(갑)	정승용	042-629-2700
	부 공적자	재무관리처	행정2급	김선호	042-629-2721
	부 공적자	재무관리처	행정3급	민정은	042-629-2725
각종대회 수상실적⁸	해당없음				
가점대상여부⁹ (입증자료 필수)	국민추천사례(+5점) ■ 혁신조달사례(+5점) □ 협업사례(+5점) □				
기타 해당 여부¹⁰	기관 중점 추진과제 ■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■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 사례 □ <small>※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차 제도 및 사업절차의 선제적 개선 ※ 한국수자원공사 적극행정 지원TF 1회, 사전컨설팅 1회</small>				
추진배경¹¹	<input type="checkbox"/> (중소기업 수주 한계) 지자체 위수탁사업임에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 적용으로 중소·지역기업 주도적 참여에 한계 <input type="checkbox"/> (코로나 위기) 중소·지역기업이 공사수주가 어려워 도산하거나 대형사의 저가 하도급사*로 전락, 불공정 사각지대 발생 <small>* 중소기업 低價 하도급으로 경영난 악화, 전문기술인 이탈 속출</small> <input type="checkbox"/> 또한, 수도공사는 복잡한 규정·절차로 착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되어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적기공급과 재정조기집행 어려움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해온 기존의 개선 노력을 넘어 확실한 참여 보장과 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 규제 혁신이 필요 </div>				
추진내용¹²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9c4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-bottom: 10px;"> 대형사 수주 독점 차단, 중소·지역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공정한 Market Share 추진으로 포용적 성장관계 구축 </div> <input type="checkbox"/> (문제점)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 참여비중 낮고(17년 28.1%), 대형사 위주로 수주편중(17년 71.1%), 예산집행 실효성 문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입찰평가제도에 절대적 불리한 중소·지역기업 신규 진입 불가 <small>* 중소기업 低價 하도급으로 경영난 악화, 전문기술인 이탈 속출</small>				

추진내용¹²

- (추진경위) 법적 근거 부재, 소통과 공감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입찰제도 단계적 확대
 - ('20. 06) POST 코로나 대응, "Market Share" 전략 본격 추진
 - * (위수탁사업 대상) 대형사 공동도급 제한, 중소·지역기업 참여지분률 상향 등
 - ('20. 08) 쏘사업(광역상수도, 수자원, 수변사업 등) 확대 적용
- (추진내용) 대형사 수주독점 차단, 중소·지역기업 수주 확대
 - (대형사 참여제한)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수급 비중 50%이내 제한, 대형사 간 공동수급 구성 금지(25억원 미만 사업)
 - (중소·지역업체 참여확대) '중소기업 참여數' 평가항목 신설(최소 2개사이상 중소기업 참여보장) 및 '지역기업 의무참여비중' 30% 설정
 - (실적 및 전문가 참여분야 완화) 수행실적 인정범위 대폭 확대 및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확대
 - * 중소·신규기업 진입장벽 대폭 완화,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
- (개선효과) 중소·지역기업 참여지분율 대폭 상승 ☞ [참고1]

대국민 인터넷 공모, 협력업체 간담회 등 다각적 의견수렴을 통한 공기업-협력업체간 불공정요소 조기 개선

- (추진내용)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
 - (전문건설사 하도급 문제 해소) 대형공사(300억 이상) 발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의무화(자체규정)로 低價 하도급 해소
 - * 종전 관행적으로 하도급 형태로 참여한 전문건설사를 직접 계약상대자로 참여토록 하여 적정대가 보장
 - ☞ 원 하도급기업간 불공정행위 차단, 중소기업 입찰 참여확대
 - (하도급사 대상 감질차단) 하도급사의 불만·애로사항 해소 및 협력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

[하도급사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]

구 분	기 존	변 경
하도급 표준 계약서 확대	건설업 분야만 하도급 표준계약서 적용	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적용 ☞ 하도급사 '불공정특약' 사전차단
대금 체불 중점 관리	식당·유류비 등 취약분야 체불 발생 및 민원소지	건설기계·식당·주유소 이용내역의 보고체계 신설(점검 근거) ☞ 건설약자 취약분야 체불 최소화
하도급사의 현장사무실비 전가 차단	협력사가 하도급사의 현장설치비용 전용 사례	발주처 공사원가에 하도급사의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포함 명시 ☞ 하도급사의 과도한 부담관행 방지

추진내용¹²

○(하도급대금 적기지급) 공기업 최초로 조달처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자체 시스템간 정보공유체계 협업구축

* 협력기업의 대금청구절차 간소화(1회 입력) 및 중복업무(5번) 제거

○(불합리한 비용부담 관행 개선) 협력기업에 적정대가 보장

[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]

구분	기 준	개 선
용역하자담보 원칙적 폐지	법적근거가 없는 과도한 용역 하자담보 책임 부담	법정 하자담보 외 폐지 ⇒ 협력사 하자담보 책임부담 완화
관급자재 관리비 반영	관급자재의 보관·관리 비용 설계시 미반영 사례	설계시 관급자재 관리비 반영 의무화 ⇒ 적정 관급자재 관리비 지급
물품타소 보관비용부담 명확화	발주처 사유로 발생한 물품타소 보관비용의 공사 임의적 부담	발주처 사유로 발생한 물품타소보관 비용 공사부담 의무화 ⇒ 협력사 불합리한 비용 부담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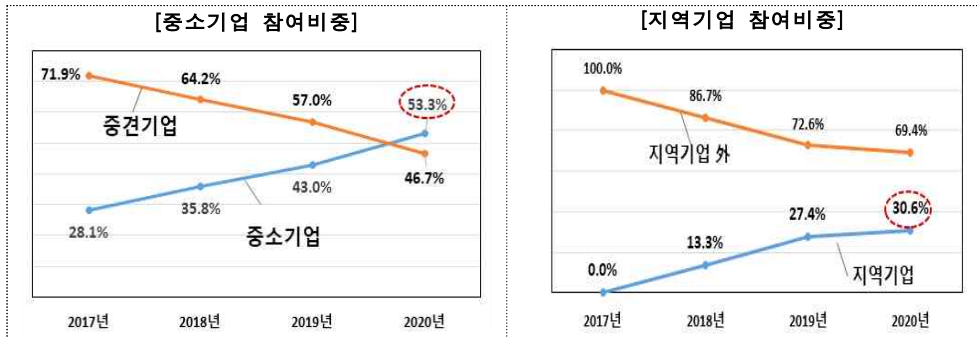
주요성과¹³

□(입찰제도 개선) 중소·지역기업 수주 확대

○ (중소기업) 수주비중 53.3%으로 개선前 35.8%대비 17.5%p ↑

○ (지역기업) 수주비중 30.6%으로 개선前 13.3%대비 17.3%p ↑

[지방 현대화사업 설계용역(19개 사업) 입찰결과 분석]



□(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화) 하도급사의 직접계약으로 통상 하도급 평균 대비 낙찰률 10% 상승효과

* SK하이닉스 용수공급시설공사(530억), 삼성전자 수수시설 공사(384억) 등

□(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간소화) 계약대금 3일 이내 조기 지급으로 하도급기업의 임금 등 체불예방 효과

* 공사계약의 95.7%, 용역계약의 90.8% 이행, 법정기간은 5일

<p>실무상 어려움¹⁴</p>	<p>□(갈등조정) 新 입찰제도(대형설계사 間 공동수급 비중 최대 50% 제한 등) 적용으로 중소·중견기업, 협력기업과 하도급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 有</p> <p>□(제도적 문제점) 관련 법률 근거 부재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 필요</p>						
<p>해결노력¹⁵</p>	<p>[1단계] 국민의견 수렴 ◦ 전사 TF 구성 ◦ 국민 아이디어공모 ◦ 국민소통 플랫폼</p> <p>[2단계] 이해관계자 등 소통 ◦ 중소, 중견기업 간담회 ◦ 하도급기업 간담회 ◦ 환경부, 지자체와의 협의</p> <p>[3단계] 전사 제도혁신 ◦ 5개 TF분과별 제도 개선 사항 도출 ◦ 10개 부서 제도개선</p> <p>□(全社 TF구성) 공정문화 확산 TF 구성, 3 개 신규과제 발굴 개선 - ('19년) 계약 11건, 소비자보호 10건, 하도급안전 9건 등 총 37개 과제(27개 완료) ('20년) 전사 TF(2기)로 확대하여 37개 추가과제 발굴하여 개선 중임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<p>공정문화 확산 추진 전담반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계약·내부준칙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상생협력, 소비자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하도급·산업안전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설계·기술심사</td> <td colspan="2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건설관리</td> </tr> </table> </div> <p>□(국민의견 수렴) 국민 체감형 과제발굴을 위해 「공정문화 확산 대국민 아이디어공모」의 의견 수렴 - ('19년) 국민대상 공정문화 확산과제 아이디어 공모 실시(20건 접수, 6건 채택) ('20년) 국민소통 플랫폼 “단비톡톡” 국민 의견 수렴(52건 접수, 7건 채택)</p> <p>□(이해관계자 소통) 지속적인 ‘중소·중견기업 및 하도급기업과의 상생간담회’를 통해 갈등 조정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모 -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입찰제도 개선에 따른 애로사항 및 이해관계 집중 논의로 갈등 조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엔지니어링 상생 간담회 개최]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/div> <p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font-size: small;"> (19.10) 중소설계기업 간담회 (19.11) 중견 설계기업 (20.7) 중견-중소 설계기업 </p> <p>○(관계기관 협업) 정부와 지자체 수탁사업 입찰관련 해당 지자체와의 개선된 입찰제도 지속 논의·설득</p>	계약·내부준칙	상생협력, 소비자	하도급·산업안전	설계·기술심사	건설관리	
계약·내부준칙	상생협력, 소비자	하도급·산업안전					
설계·기술심사	건설관리						
<p>미담사례¹⁶</p>	<p>○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관련 중소기업이자 지역기업으로서 참여여건이 개선되었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중소기업의 의견(붙임1-2)</p> <p>○ 언론보도 “중소 지역기업 지원 위해 팔 걷은 수자원공사” 등</p>						